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11.(목) 10:00
(지면) 2025. 9. 11.(목) 석간

“가격은 착하게, 안전은 확실하게”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

- 행정안전부-한국전기안전공사, ‘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 업무협약 체결’(9.11.)
- 2025~2027년 매년 3천 개 업소 대상, 전기안전점검·불량 차단기 교체 지원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11일(목) 오전,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‘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-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,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·개선해,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.
-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, 외식업·미용업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.
- 협약식이 열린 업소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으로,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이번 협약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필요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-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▲전기 안전점검, ▲불량 차단기 무상교체, ▲사후관리와 현장 안전교육을 지원한다.

- 특히,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전기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, 단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또한,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한편, 정부는 그동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▲물품 지원, ▲지방공공요금 감면, ▲홍보 활동 등을 지원해 왔으며, 민간에서도 ▲카드 결제 할인, ▲지도 플랫폼 표출, ▲KB마음가게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지원에 전기 안전 강화 효과가 더해져,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“전기설비 노후화와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-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착한가격업소는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민간과 힘을 모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	책임자	과 장 代최규웅 (044-205-3961)
		담당자	사무관 박진숙 (044-205-3921)

